

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

문흥호 (한양대학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2008년 5월 대만의 마잉주 정부 등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2000년 집권 이후 8년간 정치·경제·사회의 '대만화' (正名)와 양안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했던 민진당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후퇴시켰다. 둘째, 마잉주 정부의 '走本土', '光富臺灣' 정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안의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정치·안보관계가 대립보다는 화해를 지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마잉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내외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이 안고 있는 고질적 현안인 소위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대립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三不', '三通' 관련 정책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양안정부의 대리기구인 '海協會', '海基會'의 협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안교류의 제도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적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유엔가입 및 독립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活路外交'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마잉주 정부의 출범 이후 양안관계는 명실 공히 상생·공영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국정부의 대 대만 포용정책에 힘입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판매 결정에 따른 중·미, 중·대만관계의 경색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문제의 구조적 특성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요인이 양안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전히 양안관계의 불안정 요인이다.

목 차

- 1. 마잉주 집권 과정의 주요 특징과 양당의 선거 전략
 - 가. 마잉주 집권의 대내외적 요인
 - 나. 국민, 민진 양당의 주요 선거 전략과 쟁점
 - 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의미
 - 2.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과 양안관계 전망
 - 가.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
 - 나. 양안 교류협력 확대와 '走本土' 노선 추진
 - 다. '활로외교'(活路外交) 추진과 국제적 활동 공간 확대
 - 3.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대응 방안
 - 가. 양안 교류협력의 사안별 검토와 활용
 - 나. 한국·대만관계의 전략적 운용과 교류협력 확대
- 〈참고〉 대만의 정치과정과 총통 선거

1. 마잉주 집권 과정의 주요 특징과 양당의 선거 전략

가. 마잉주 집권의 대내외적 요인

- 민진당 정권의 실정과 여론의 비판 고조
 - 2000~2004년: 집권 초기부터 민진당의 집정 능력 한계 노출(재 집권 불가한 것으로 전망됨)
 - 2004~2008년: 민진당 정권의 한계 심화와 무리한 정책 추진, 천 총통 집권 후반기 리더십의 정통성 상실
 - 대만 독립, 유엔 가입, 신헌법 제정 추진 등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천 총통의 친인척 비리 등이 민진당 입지를 더욱 악화 시킴.
- 2008년 1월 입법원 선거 압승으로 국민당이 대선 분위기 주도함.
 - 국민당은 입법원 총 113석 중 81석 석권(지역구: 61, 비례: 20)
 - 반면 민진당은 27석을 얻는데 그침(지역구: 13, 비례, 14)
- 경제적 요인의 절대적 영향
 - 민진당의 경제정책 실패 비난
 - 국민당의 경제우선주의, '경제 살리기'(光富臺灣) 구호가 절대적 위력 발휘함.
- 대외적 요인의 영향
 - 한국의 대선 결과가 국민당에 유리하게 작용
 - 2000년 3월 티베트의 독립 요구 시위 고조(중국의 무력 진압에 대한 馬의 미온적 태도로 지지율 일시적 하락)
 - 미국의 마잉주 편애(陳: trouble maker vs. 馬: peace maker)
 - 선거 막바지 馬의 미국 영주권, 자녀의 미국 시민권 소지에 대한 대만 여론의 비판

나. 국민, 민진 양당의 주요 선거 전략과 쟁점

- (1) 民進黨
 - 대만의 민주화, 주체화(正名)
 - 민진당의 민주화 투쟁과 공적 강조, 국민당의 과거 계엄 통치 비난
 - 대만의 토양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국민당 비난(臺灣化될 수없는 국민당)
 - 입법원 선거 참패 이후 의원의 3/4을 장악한 국민당에 총통마저 내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국민당의 '一黨獨霸'를 막기 위해 '最後一席은 민진당으로', '大逆戰' 구호 강조
 - 대륙과의 제한적 교류, 경제적 의존성 완화
 - 대만 경제의 70%가 대륙에 집중(더 이상의 의존은 종속화 야기)
 - '有效管理'를 통한 양안교류의 선별적 추진 강조
 - 대만 명의 유엔 가입(入聯) 추진
 - 국민투표(公投) 회부, 신헌법 제정 추진
- (2) 國民黨
 - '경제 살리기' 강조
 - 왜 한국에게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뒤졌는가?
 - 6·3·3 정책 대대적 홍보(성장률 6%, 국민소득 3만 달러, 실업률 3% 억제)
 - '一中市場'(one China market) 추진
 - 양안 경제교류의 확대 심화
 - 민진당의 대륙 의존 심화 비난으로 다소 수정

민진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국민당은
경제재건과
양안관계개선을 공약

대만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르게 득표하며 국민당이
선거에서 압승

- 새로운 변화 강조(臺灣要改變!)
 - '走本土'의 실용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회복
 - 대만 독립의 지양, 국제적 지위 개선
 -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 강화

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의미

(1) 선거 결과 분석

- 국민당의 압승
 - 馬英九·蕭萬長(馬蕭): 765만 8724표(58.45%)
 - 謝長廷·蘇貞昌(長昌): 544만 5239표(41.45%)
- 대만의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당이 고르게 득표
 - 민진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남부, 중남부지역에서도 선전
 - 高雄市에서도 馬가 우세
 - 高雄縣, 屏東縣에서 근소한 차이 열세
- 유세 기간의 티베트사태와 마잉주의 미국 편향 논란 등 민진당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대만인들의 열망이 국민당을 선택
 -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양안의 '三安'(安定, 安全, 安心) 희망
- 유엔 가입 국민투표 부결
 - 국민당의 中華民國 명의의 유엔 복귀안(返聯), 민진당의 대만 명의 가입(入聯) 모두 부결(투표율이 약 35%)
 - '不統不獨'의 양안 현상유지 희망 정서 재확인

(2) 정치적 의미

- 천수이볜 정부의 지도력 상실과 정통성 위기
 - 국민당 50년 독재 종식, 정치민주화 확립의 크나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패
- 국민당의 조직·인사 혁신과 경제우선주의에 대한 기대
 -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한 국민당의 자기 변혁과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비전 제시, 마잉주의 개인적 경력·자질이 결합
 - 특히 마잉주의 미국 내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 확산
- 신세대 대만인의 실용적 '統獨觀' 확산
 - 국민당의 '走本土' 노선이 민진당의 정명·독립 노선을 압도
 - 外省人和 本省人の 대립·갈등 완화
 - 新臺灣人的 '대륙관'과 新大陸人的 양안관계 인식 변화

2. 마잉주 정부의 대내외정책과 양안관계 전망

가.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

- 당·정 체제 정비와 인적 쇄신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실천할 진용 정비
 - 선거 과정에서 야기된 정치권의 대립·갈등 구도와 사회적 분열 국면 해소
 - 천 총통의 수감,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2009.8) 등으로 야기된 대만의 여론, 정치권의 대립·혼란 완화
- 마 총통은 각료 인선과정에서 밀실 정치의 종식과 정치 투명도 제고 필요성 강조
 - 특히 취임 직후 행정원 직속의 '청렴위원회'(廉政委員會)를 설립

민진당의 패배는 대만이
민주화 이후 정치적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패한
것을 의미

마잉주 정부는 출범후 사회적 통합, 국민적 공감대 확보, 양안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

하고 ‘不願食’, ‘不必食’, ‘不能食’, ‘不敢食’의 소위 ‘四不食’ 강조

- 류자오셴(劉兆玄) 초대 행정원장에 이어 신임 행정원장에 우둔이(吳敦義) 임명(2009.9.10)

○ 중국과의 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에 리덩후이 전 총통이 주도하는 대만단결연맹(臺聯) 소속 입법위원을 지낸 라이싱웬(賴幸媛) 전격 기용

- 대만단결연맹은 급진적인 대만독립주의 정당
- 리덩후이, 천수이볜, 마잉주의 통일·독립 성향의 차이는 정치권의 통독문제 관련 인식의 분열 대변

○ 민진당 정부의 ‘正名’ 운동을 완화 내지는 백지화하는 ‘復名’ 운동 추진(中華, 中正 명칭의 복원)

- 민진당 정부와 구별되는 자기식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추진(總統府 이전 추진 등)

나. 양안 교류협력 확대와 ‘走本土’ 노선 추진

(1) 양안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장천 회담(江陳會談) 추진

○ ‘왕꾸 회담’(汪辜會談)

- 1993년 4월 중국의 왕다오한(王道涵) 해협회 회장과 대만의 꾸젠푸(辜振甫) 해기회 이사장을 대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최초 회담
- 정부간 공식적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을 우회하여 양안 교류협력의 제도화, 법제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 1995년 리덩후이의 방미, 양국론 주장 등으로 양안관계가 악화되면서 후속 회담 불발

○ 비공식적 양안 회담과 지도부 교류 적극 추진

- 不統, 不獨, 不武의 소위 ‘新三不’ 정책을 대륙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설정

- 하오보춘(郝伯村) 전 행정원장 방중과 군사·안보적 신뢰 구축
- 양안정책의 핵심은 개방·원화를 원칙으로 하고 관리를 예외로 함(규제 축소).

○ ‘장천 회담’의 경과

- 마잉주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당·공산당 지도부의 각종 회담과 천윈린(陳雲林) 해협회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해기회 이사장을 대표로 한 4차례의 ‘장천 회담’을 통해 ‘三不’, ‘三通禁止’를 철회 내지는 완화함.
- 1차 베이징 회담(2008.6), 2차 타이베이 회담(2008.10), 3차 난징(南京) 회담(2009.4), 4차 타이중(臺中) 회담(2009.12)

○ ‘장천 회담’의 전략과 원칙

① 擱置爭議, 互不否認

- 현 단계에서 합의 불가능한 쟁점 사항은 일단 논의를 보류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함.
- 대만의 정치적 지위, 주권과 관련된 타협불가 사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양안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경제, 문화, 사회분야의 현안들을 논의함.
- 중국과 대만의 최고지도부는 양안협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실의 직시’(正視現實), ‘상호신뢰 구축’(建立互信), ‘해결 가능한 현안의 우선적 접근’(先易後難), ‘공생공영의 추구’(共創雙贏)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함.

② 以臺灣爲主, 對人民有利

- 양안간 협상의 의제 설정, 협상 과정, 협상 복안의 안배 등에 있어서 대만의 주체성, 대등성 등을 고려

4차례의 장천회담을 통해 三不, 三通禁止를 철회 내지 완화

마잉주 정부는

'마잉주노믹스'를 중심으로
경제재건을 최우선적으로 추구

- 이는 대만 정부가 양안협상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제반 협상에서 강조하는 주권, 국격의 유지에 관한 것임.
- 중국 역시 대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독립문제'를 제외한 어떠한 사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임.

③ 經貿優先, 爲民興利

- 경제무역 분야를 우선시하고 양안 주민의 공동번영을 도모함.
- 이는 제반 협상과정에서 민생, 경제발전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중국과 대만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공유함으로써 양안의 경제적 윈-윈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2) '주본토' 노선과 '마잉주노믹스' 추진.

○ 마잉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마잉주노믹스'를 중심으로 대만의 경제성장 동력을 재정비하고 집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제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 민진당정부가 실패한 '민주화 이후의 국가 통합과 경쟁력 강화' 실현이 관건

○ 경제활성화 정책은 제도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내적 정비와 함께 '주본토' 노선에 입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

○ 이러한 정책 기조는 ①현실적으로 양안의 경제협력 확대 이외에 대만경제의 재도약을 촉진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고, ②양안경협이 확대는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정치·안보적 대립을 완화시킴으로써 안보 불안과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③양안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미국의 긍정적 인식과 지지를 얻는 '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임.

- 대만이 직면한 대내외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목적의 합리

적 처방

○ 양안 교류협력 성과

① 삼통의 현실화

-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양안의 주말(금~월) 전세기 운항
- 1일 3000명의 중국인 관광객 대만 입국
- 2009.8.31 이후 양안 정기 여객기(매주 135편) 및 화물기 취항(매주 14 편)
- 직항으로 연 약 2조원의 대만 관광산업 부양 효과(약 4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② 경제교류 확대·심화

- 대만 전역의 시중은행에서 중국 위안화 환전 업무 개시
- 중국 기관투자자들의 대만 증시 간접 투자 허용
- 대만 금융기관의 중국 주식 투자 제한 완화
- 자본금 규모별 대륙투자 규제 조치 완화(자본금 50억 대만 달러: 40%, 50~100억: 30%, 100억 이상: 20% 이내)
- 대만의 대 중국 수출 비중: 2007년 약 30.1%(수출액: 743억 달러), 2008년 약 39%(수출액: 996억 달러)
- 대만의 대 중국 수입 비중: 2007년 12.8%(수입액: 280억 달러), 2008년 13.7%(수입액: 329억 달러)
- 대만의 대 중국 투자: 2008년 말 기준 공식적으로 약 451억 달러이나 실제로는 1000~1500억 달러 추산

③ '一市場' 추진

- 양안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마잉주 정부는 일단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

마잉주 정부는 삼통의
현실화, '一市場' 추진
등을 통하여 양안교류를
확대

대외정책으로 형식보다는
내실, 이상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

해 대만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가동한다는 ‘마잉주노믹스’의 기본 방향을 견지함.

- 이를 위한 대표적 정책은 중국과의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ZWCTS’ (Economic Zone on the West Coast of Taiwan Strait),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등의 추진임.
- 특히 ‘ECFA’ 체결은 마잉주 정부의 중점 정책이며 대만 내의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마잉주정부는 중국과의 ‘ECF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만 경제가 1.65%~1.72% 성장하는 동시에 26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반면 이에 반대하는 야권 등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대거 수입될 경우 대만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오히려 16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만의 대 중국 경제 종속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함.

다. ‘활로외교’(活路外交) 추진과 국제적 활동 공간 확대

- 대외적 과제 의 핵심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생존 공간’ 축소와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임.
- 이는 특정 정권을 불문하고 1970년대 이후 대만의 역대 정권이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난제
- 호혜적 현상유지와 경험 강화에 중점을 둔 대륙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심한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는 독립 주장을 지양하고 주권국가에 준하는 정치실체로(a de facto separate political entity)서의 지위를 확대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 이는 기존의 급격한 독립 추진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좁혔다는 인식과 현 단계에서 대만의 독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것임.
- 결국 ‘92共識’, ‘一中各表’를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형식보다는 내

실, 이상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임.

- 2009년 5월 세계보건기구 연례회의(WHA)에 대만 衛生署長(보건부장관) 참여 연설, WMO(세계기상기구)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FAO(식량농업기구) 등의 가입 추진함.
- 대만의 WTO 가입 명칭: ‘Seperate Customs Territory of TPKM’ (‘TPKM’은 타이완 · 평후 · 진먼 · 마주의 영문 표기 첫 글자)

○ 실용외교의 연장선에서 중국과의 소모적 외교전 중단

- 마충통은 중국과의 ‘악성 외교경쟁 지양’ (外交休兵), ‘탄력적 실리외교’를 통해 국가의 존엄성 회복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
- 과거 대만은 중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바 있으나 2007년 파푸아뉴기니 비밀외교의 실패와 같이 많은 경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중국으로부터 ‘金錢外交’를 자행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마잉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긍정적 인식, 마잉주의 개인적인 미국 내 기반은 미·대만관계의 실질적 변화 촉진할 것임.

-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모호성’과 이중정책에 부합하는 인물인 마잉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희망해왔음.
- ‘대만관계법’의 위상과 타이베이의 ‘미국 대표부’ (AIT: American Institution in Taiwan), 워싱턴의 ‘대만대표부’ (TECRO: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U.S.)의 기능 체계화 · 내실화

○ 결국 마잉주 정부는 일단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부활을 장기적인 과제로 묻어두고 대만의 국가적 통합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에서 대외정책 기초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미국과의 다각적인 관계 강화가 중요한 변수임.

- 물론 국제사회의 외교전장은 대부분의 경우 양안의 외교적 ‘원-

중국과 소모적 외교전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대만처럼 탈이념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 역시 2010년 1월 29일 64억 달러에 달하는 대 대만 무기 판매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양안관계의 안정과 호혜적 발전만을 기원하는 'honest broker'가 아님 (실제로 미국은 최근 양안의 급속한 밀착을 경계).

- 따라서 마잉주 정부의 '활로외교'가 경우에 따라 활로를 상실할 가능성은 상존함.

3. 양안관계 변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대응 방안

가. 양안 교류협력의 사안별 검토와 활용

(1) 탈 이념적 정책결정과 점진적·단계적 관계발전

○ 양안 지도부의 탈 이념적 상호인식과 정책결정

- 과거 중국과 대만은 상대방을 해방, 수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이념·체제에 기반한 물리적 통합만이 고려의 대상이었음.
- 공존공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비로소 교류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또한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점진적·단계적 실천과정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음.

○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 장기간의 적대관계를 경험한 두 체제간의 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탈 이념적 인식과 정책결정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전반의 탈 이념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단기적, 일시적 성과 위주의 정략적 교류협력이 추진되거나 대결적 단절 상태가 심화됨으로써 소기의 성과 없이 국론만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한국의 경우 정당, 지역, 계층, 세대간 이념적 성향과 남북한관계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양안관계의 탈 이념적 경향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교류·협력의 제도화

○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장기적 비전 제시

- 경제교류 중심의 양안 교류협력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교류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의 범위 확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기존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없이 교류협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통한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어려움.
- 중국과 대만의 경우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협의 채널이 부재한 상황을 우회하기 위해 준정부기구인 해협회, 해기회를 막후교섭 창구로 적극 활용함.

(3) 분야별 교류협력의 균형

○ 경제교류의 참여자와 수혜자 확대

- 교류협력 과정의 소외자와 무관심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대만의 농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 조치 단행

○ 교류협력 분야의 다양화 및 균형 유지

- 경제교류의 편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인적 교류, 학술교류, 언론교류, 문화·체육교류 등의 활성화를 통해 양안주민의 상호이해 폭을 넓히고 쌍방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했으며 남북한관계 역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교류협력의 제도화,
참여자와 수혜자 확대,
다양화와 균형유지가 중요

한-대만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대표부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
교류확대가 필요

나. 한국·대만관계의 전략적 운용과 교류협력 확대

(1)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Korean Mission in Taipei)와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Taipei Mission in Korea)의 위상·역할 강화

○ 각 대표부의 위상과 기능의 제고

- 양국 대표는 해당 국가 외교부처의 서열상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외교 기능이 매우 미약하며 특히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의 경우 부담없이 거쳐 가는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함.
- 따라서 각 대표의 전문성, 적극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취약점은 국가간 관계가 아닌 비정치·민간차원 관계로서의 한국·대만관계가 갖는 한계와 결부되어 더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대표부 대표 및 구성원의 활동범위와 접촉 대상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경제·사회·문화교류의 확대

○ 경제교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대책 필요

- 한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경제교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 1992년 단교 이후 양국은 상당 규모의 통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무역액의 경우 2007년 말 기준 한국의 대 대만 수출은 151억 5900만 달러, 수입은 77억 9500만 달러이며 2008년 말 기준으로는 수출이 132억 달러, 수입이 87억 8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5~6위 무역 대상국에 해당하는 무역 규모로서 한국·대만관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비중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비중임.

○ 사회·교육·문화교류 활성화

- 단교 이후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급격하게 단절되었는

데 이는 정부 혹은 해당 단체·기관의 근시안적인 조치였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장기간 지속되던 학술·문화교류 등이 중국에 대한 자발적 배려 혹은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기대 때문에 일시에 중단됨으로써 한국·대만관계가 극도로 악화됨.
- 따라서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원-원의 경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한·중관계의 고려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경제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한 실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3) 비정치 분야의 정부간, 준정부간 접촉 확대

○ 한국과 대만의 상호 인식 차이 해소

- 한국은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지만 대만은 엄연한 실질적 주권국으로서의 대우를 원함.
- 특히 대만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비해 한국에 유독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이러한 경향은 국민당 재집권 이후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
- 심지어 국민당내 보수 인사들은 상해 임시정부와 국민당의 관계를 한국·대만관계의 시발로 인식하기도 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만과의 관계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요구와 압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정치 분야에서의 정부간, 준정부간 접촉을 확대

아울러 한국과 대만 간
상호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

비정차분야에서도 양측이
정부간, 준정부간 접촉을
확대하여야

- 예를 들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의 정례화는 물론 협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만과의 정부간, 준정부간 협의의 확대는 철저히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대전제에 부합되어야 하며 미국,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한 직간접적 견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구상에 동참하는 차원의 한국·대만 관계발전 시도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참고〉 대만의 정치과정과 총통 선거

- 1992년 총통 직선제 개헌
 - 1996년 첫 총통 직선에서 리덩후이(李登輝) 당선
 - 2000년, 2004년 천수이벤(陳水扁) 민진당 후보 당선
 - 2008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 당선
- 국민당(KMT)과 민진당(DPP)의 대결
 - 직선제 실시 이후 총통 선거는 대만 정치과정의 최대 변수
 - 국민당과 민진당은 양안의 교류협력, ‘統獨問題’, ‘유엔 가입’, 신헌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대결
 - 국민당과 민진당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대립 불가피
- 중국은 의도적으로 대만의 총통선거를 ‘대만 당국자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로 폄하해 왔으나 실제로는 예외주시함.
 - 특히 양안의 ‘통독문제’와 관련된 대만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대만 최고 지도자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함.
 - 국민당의 재집권 긍정적 평가, 마잉주의 국민당 주석 당선(2009.7.26)에 후진타오(胡錦濤) 축전

편집: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